

# 저출산 극복 한다더니...광주시 '난자동결 지원' 유명무실

### 높은 선정 기준 3명 지원 그쳐...쥐꼬리 예산마저 삭감 시, 추경 예산 증액커녕 '수혜자 적다'며 86%나 줄여 박미정 의원 "기준 낮추고 희망 여성에 혜택 확대해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광주시의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이 높은 지원 기준 탓에 대상자를 찾지 못해 예산 삭감 위기에 처했다. 광주시가 저출산 문제 대책으로 내놓은 사업이지만 비현실적인 조건으로 지원을 받는 여성이 3명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사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광주에 거주하는 난임 진료 인원은 4230명으로 추산된다. 20세~49세 여성 중 1.5% 이상이 넘을 정도로 난임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 예산을 7000만원 편성했다. 하지만, 높은 지원 기준 문턱 때문에 현재까지 지원을 받은 여성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 비도 330만원에 그쳤다. 난자 동결 시술은 난소 기능 저하로 난자를 동결해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에게 시술 비용을 지

원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시술비 지원 대상은 난소 기능 저하에 따라 항물로관호르몬(AMH) 수치가 1.5ng/mL 이하이며, 중위 소득 180% 이하로 광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이다. AMH는 난소 나이 측정 기준으로, 20~50세 여성 평균은 3.6ng/mL이라는 점에서 지원 대상인 1.5ng/mL 이하의 수치를 맞추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시는 시술 비용의 50% (최대 200만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난자 동결 시술 후 진료 내역과 검사 결과 등을 첨부해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 후 시술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지원자 중 AMH와 소득 기준 부적합으로 42.8%, 거주 요건 부적합으로 28.6% 등이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이상이 부적합 대상인 셈이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지원 기준

을 낮출 생각은 하지 않고 수혜자가 적다는 이유로 오히려 나머지 예산마저 삭감 요청을 해 광주시의 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광주시는 이날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원 대상 기준이 높아 수혜자가 적다"는 이유로 나머지 예산 6000만원을 감액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미정(민주·동구2) 광주시의원은 "젊고 건강할 때 난자 동결을 하는 것이 향후 임신에 유리한데 기준이 높아 수혜자가 거의 없다"고 지적하면서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난소 기능 저하 전 여성이 젊고 건강할 때 난자 동결 시술을 지원해야 향후 출산율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동결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와 난소 예비력으로, 연령과 상관관계가 높은 AMH 수치와 소득 기준으로 대상을 제한해 사업 효과의 한계는 이미 예상됐다"면서 "저출산 시대에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큰 과제이며, AMH 수치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난자 동결을 희망하는 많은 여성에게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기준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서울·충북·전남·제주 등 타 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다만 지원 기준이 까다로우니 전체 난자 동결 시술자의 일부(11월 기준 약 20%)만 지원받을 수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에 AMH 수치와 중위소득 기준의 폐지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출범'에 참여한 G20 각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채택 트럼프 시대 부상 보호무역 경제

### 글로벌 부유세 부과 협력 명시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해법 마련 촉구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G20 정상회의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G20 사무국은 이날 홈페이지에 85개 문구로 된 영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 G20 정상회의의 공동 선언문 전문을 공개했다. G20 정상들은 ▲국제 경제 및 정치 상황 ▲사회 통합과 기아·빈곤 퇴치 ▲지속 가능한 개발, 에너지 전환 및 기후 행동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 개혁 ▲G20의 포용성 및 효율성 등 소단락으로 구분된 선언문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 빈곤 인구 감축, 사회 불평등 축소 등에 대한 의제에 광범위하게 합의했다. 선언문에는 의장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대통령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논의된 글로벌 부유세 부과와 관련해 "조세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조고액 순자산가에게 효과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관련 협력 방안으로는 '모범 사례 공유, 조세 원칙에 대한 토론 장려, 잠재적으로 유해한 조세 관행 처리를 포함한 조세 회피 방지 메커니즘 구축' 등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대변되는 지정학적 긴장 해소를 위한 당사국의 전략적 해법 마련도 촉구했다. G20 정상들은 인도주의 관점에서의 가자지구 내 재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전면적인 휴전과 함께 민간인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보호를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지속적인 평화를 지원하는 모든 건설적인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고 명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재집권을 전후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는 국제사회의 긴장감도 반영됐다. G20 정상들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비차별적이고 공정하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공평하고 지속 가능하며 투명 한 다자무역 시스템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교역을 둘러싼 도전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엔 운영 과정에서의 효율성·투명성 개선, 다자 개발은행 내 개발도상국 대표성 강화, 국제통화기금(IMF)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빈국 쿼터 확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밖에도 정상들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정부 간 협상 위원회(INC-5)에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춘 '유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을 성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다만, 개발도상국의 지구 온난화 문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에서 모색하는 신규 기후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AFP·로이터통신은 G20 정상들이 "교착 상태에 빠진 기후 회담 돌파구 마련"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AP통신은 문구의 구체성 부족을 지적하면서 "전체적인 초점이 룰라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인 기아 근절에 맞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외신들은 주요국 외교관들을 인용, 회원국 실무진이 주말을 포함해 마라톤 협상을 거쳐 공동 선언문을 마무리했는데, 이중 기후 분야에 대한 논쟁은 '일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별도 성명을 통해 "합의문 도출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빈곤 퇴치를 위한 당국 노력 경주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대통령실 "G20 정상 선언문에 건전재정·AI 등尹 제안 4대 의제 포함"

대통령실은 18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공동 선언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주요 주제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총 85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번 G20 정상선언문에 우리나라가 강조·제시했던 4개 정도의 주제들이 주요 항목에 잘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은 ▲각 나라의 건전 재정 확보 노력 촉구

구(제5항) ▲부산 개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의 시시점을 반영한 플라스틱 감축 노력(제58항) ▲포용·안전·혁신 원칙에 입각한 인공지능(AI) 사용·개발(제77항)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무탄소 에너지(CFE) 확대를 통한 국제적 연대 심화(제42항)다. 정상선언문 제7항은 모든 당사자의 국제법상 원칙 준수 의무를 적시했으며, 이는 북한군이 파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여러 분쟁을 포함하는

맥락이라고 김 차장은 말했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도국과 선진국 간 협력을 잇는 '번영의 가교',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2022년부터 내년까지 4년 연속 글로벌 사우스가 의장직을 수임하고, 개발 의제 비중이 한층 커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책임 외교 기조가 더욱 적실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